교수 채용에 있어서 국내박사 할당제의 의미

이 태 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얼마 전 어떤 유명 일간지에 '서양 이론의 수입상'이란 제목하에 우리학계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KBS와 교수신문이 공동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지성계의 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문제의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학계가 서양이론의 단순한 수입상에 불과하다는 다분히 자극적인 요약을 했는데, 그 근거는 설문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100명의 인문사회학계 교수 중 37%에 해당하는 최대다수가 우리나라 학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서양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데에 있다.

또 같은 설문 조사에 응한 교수들 중 9%에 해당하는 수가 '지나친 미국편향성'이란 대목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항목과 앞의 항목 둘을 합쳐서 평가하자면 대체로 과반수가 '학문의 자주성 부족'을 우리 학계의 가장 아픈 곳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사실 특별히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아도 학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우리 학문의 자립도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의 기사는 그런 평가를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또 한 가지 거북한 사실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즉, 국내 유수 대학에는 서양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출신의 교수가 절대 다수라는 사실을 통계수치까지 조사해서 밝히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정을 잘 몰랐던 학계 밖의 사람들로서는 그 수치를 통해 드러난 불균형은 경악할 만한 정도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학계 내부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진즉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진상은 알려진 수치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 한 예지만 서울대학교의 교수 중 미국박사 84.5%를 포함하여 서양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의 수가 90%를 넘고, 국내박사학위 취득자의 수는 단지 8.6%일 뿐이다. 그런데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그나마 적은 국내박사가 소수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연구 대상의 영역 성격상 외국대학보다는 국내대학이 당연히 중심부의 위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분야, 그래서 외국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학위과정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국문학이나

국어학, 국사학, 그리고 국내의 임상 자격과 무관할 수 없는 의학 분야 등에서 만이 국내박사 비율의 전부를 채우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수 구성만 보자면 마치 어떤 서양대학의 분교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문제의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국내박사와 해외박사 비율이 우리 학문의 자립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해외박사가 많은 까닭에 학문의 주체성이 약한 것인지, 학문의 주체성이 약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해외박사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두 사정이 서로 간에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로서 작용을 했던지 간에 둘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어쨌든 논리적 필연의 관계는 아니란 점도 사실이다. 즉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했어도 외국 이론에만 심취하여 시종 그것을 추수하기에만 골몰할 수 있듯이, 그 역으로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에서 학문 활동을 하면서 외국의 그늘을 벗어나 주체적인 학문이론과 담론을 개발해 내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는 꼭 콩만 나는 것과는 달리 해외박사가 절대다수인 대학에서도 주체적인 학문이 태어나 잘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런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지금처럼 계속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을 절대다수로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박사학위 취득지 분포상에 나타난 심한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오직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언제쯤 그것이 현실이 되느냐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명확하게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을 세워 목표달성을 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 확실한 전망을 답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사회에서 학계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면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뿐이다.

사실 그저 기다리라는 식의 주문은 우리나라 사회 일반의 구미에 맞지는 않는다. 그러느니 좀 무리가 되더라도 아예 제도적 강제를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편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가령 교수채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국내박사들에게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우선 국립대학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 부문에서는 익숙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비슷한 것을 학계에서도 써보자는 것인데, 뒤는 어떻게 되든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교수채용 단계에서 교수직에 응모하는 후보자의 출신 대학을 제한하는 법령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 그때도 사회 일각에서 학문의 세계에서 동종교배가 매우 유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들리더니, 급기야 법의 힘을 통해 문제를 강제 시정하는 방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대학사회에서 교수 부문에 있어서의 출신학교별 인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하게 여겨졌던지, 아니면 강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영구히 우리나라 대학 간의 인적교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 했던지 간에 이 방안이 채택되는 과정은 실로 단호하고도 신속했다. 좀 더 득실을 따져 논의를 깊이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전체적으로는 동종

교배가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질 관리의 부실이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적 팽창을 하다 보니 실력 있는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선순위로 말하면, 대학별로 교수 부문의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어 소위 동종교배를 막는 일 이전에 실력 있는 교수부터 채용하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권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일단 채용 단계에서 실력 이외에도 출신 대학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강제된 것이니 성급한 조처란 감이 아니 들 수 없다.

국내박사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제하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아직은 교수 채용에 있어서 국내대학 출신 박사들의 몫으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자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것이 심각한 이슈로 주목을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 동종교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신속히 마련된 것처럼 일거에 정책이 추진되고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기우는 아닐 것이다. 바라건대 이번에는 미리부터 국내박사대 해외박사의 비율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관해 좀 더 깊이 천착해 보고, 정책적 개입의 득실에 관한 셈을 정확히 하여 더 이상 성급한 조처를 거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선 학문의 주체성과 교수들의 국내박사 학위 비율의 상관관계도 분야별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공계열 학문 분야와 인문사회계열 학문 분야 간에는 그 상관관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강도가 같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공계보다는 아무래도 인문사회계가 학문의 주체성 문제를 좀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박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현재의 사정을 곤혹스럽게 여길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이 지닌 의미가 수학이나 물리학 분야와 철학이나 정치학 분야의 경우가 꼭 같지는 않은 것이다. 미국에서 다루는 수의 체계나 물리현상의 세계가 한국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고 강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반면 한국 특유의 사상과 전통이나 정치현상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당연한 일로 수긍할 것이다.

이공계에서도 학문의 자립도 문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연구내용의 이념적 주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다지 큰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이공계 연구 분야는 학문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국제적으로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 우리로서는 그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워낙 절실한 문제여서 다른 문제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 이공계에서 교수 채용을 하면서 학사과정은 본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수학을 해야 하고, 또 박사학위는 국내에서 취득해야 한다는 식의 제한을 두고 적임자를 고르라고 강요받는 것은 고무적인 일일 수 없다.

인문사회계라고 해서 국내박사의 비율을 강제로 높이는 방안에 선뜻 찬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의 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주체성이 있는 학문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지만, 주체성이란 것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 조장된 것은 진정 값

> “
> 국내박사 할당제는 국내 대학원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 중
> 한 보조 방안일 뿐이다. 그 보다 더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은
> 대학원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 학위과정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정통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통의 해결 방안을 통해
> 우리 대학원을 제대로 살리면, 틀림없이 우리 학문의 주체성과 자립성은
> 뒤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과가 될 것이다.
> ”

진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의 학문에서보다도 자유로운 창의성 발현이 중시되는 인문사회계열 분야에서는 위로부터 강제된 주체성 제고 방안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주체성만으로 가치 있는 학문적 성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인문사회계에서도 이공계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새삼스럽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학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학문 연구 활동을 시작한 역사가 아주 일천한 것이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성균관과 같은 자랑스러운 고등교육의 역사를 언급할지 모르나,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성균관의 학문전통을 계승한 기관은 아니다. 알다시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역사는 큰 단절을 겪었다. 과거 학문의 전통이 끊기고 일본의 중개를 통해 서구의 학문을 수용하면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지성사였던 것이다. 그나마 20세기 전반기의 일제 강점기간과 해방 후 전쟁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대학에서 본격적인 학문 활동이 수행된 역사는 20세기 후반으로 제한된다.

20세기 후반의 50년이란 것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신생대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후하게 잡으면 대학의 제도 내에서 학문의 교육·연구의 역사의 한 세대가 겨우 지나간 셈인데, 그쯤의 기간이면 이제 막 국내박사가 배출되어 나오기 시작할 즈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품질이 어떤지는 아직 더 시간을 두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인 규모로 양산되는 국내의 박사학위가 전체적으로 양질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내박사 대 해외박사 비율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들면, 자칫 교수의 질적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우를 범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학위의 질 관리체제를 엄격하게 정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하는 일이란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수채용 시 일정 몫을 할당하는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결코 학문의

자립이나 주체성에 있을 수 없다. 그보다는 국내의 대학원 과정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은 국내의 일류대학 대학원에서도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실력 있는 지도교수에, 장학 지원이나 연구 환경이 훨씬 더 좋고, 학위 취득 후 현지와 모국 양쪽에 다 취업이 가능한 외국 명문대학으로 우수인력이 모이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다 보면 국내 대학원은 당분간 자격 미달의 맹목적인 학위 취득 희망자들로 붐비겠지만, 결국은 쓸모없는 기관임이 밝혀져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학문의 자립성이 완전히 사라진 사태의 그림 밖에 될 수가 없다.

국내의 대학원을 살리는 것은 우리 학문의 자립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로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제의 해결은 장학지원, 연구 환경 개선, 국제적인 수준의 실력 있는 교수 확보 등 국내 대학원이 우수인력에게 흡인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일을 포함한다. 이런 일의 일환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내박사에게 교수채용 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중요하다. 혹시라도 할당의 규모가 작을 경우 유인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걱정을 해서 규모를 뚜렷하게 가시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내박사들이 취직 기회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당장의 유인효과는 커 보이겠지만, 국내대학의 교육, 연구의 질은 손상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게다가 국내대학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할당의 비율을 강제할 경우에는 그 강제가 동종교배를 금지하는 현재의 법령과 같이 작용을 하여 교수채용의 틀을 매우 답답하게 옥죄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제도는 일종의 교수집단의 하향평준화와 같은 것을 목표로 하는 인상을 주기 조차할 것이다. 국내박사 할당제를 하더라도 그 규모를 갑자기 크게 잡기 보다는 조심스럽게 작은 규모에서 출발하는 것이 온당하며, 나아가 제도의 선택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통한 적극 장려를 하는 것이 일률적인 법적 강제를 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다. 어쨌든 국내박사 할당제는 국내 대학원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한 보조 방안일 뿐이다. 그 보다 더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은 대학원의 교육 ·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학위과정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정통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통의 해결 방안을 통해 우리 대학원을 제대로 살리면, 틀림없이 우리 학문의 주체성과 자립성은 뒤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과가 될 것이다.

이태수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철학석사학위를, 독일 괴팅겐오르크아우구스트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육사 교수, 독일 괫팅엔학술원 연구원, 교육부 대학정책실 실장, 서양 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대학원장, 한국철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삶, 반성 그리고 인문학』, "'아에네이아스' 6권에 나타난 로마인의 가치관", "표현, 이해 그리고 자유", "전자 텍스트와 인문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각이론과 기능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와 그 전승", "인문학의 두 계기 : 진리탐구와 설득" 등이 있다.